

--	--	--	--	--

A1-2009-0082 농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참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농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조사수행은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9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되며, 통계적인 자료 분석
 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팀
 김 수 석 박사

[조사대행기관]

실사연구원 : 김명희 과장 (02) 3484-3045

응답자 성명		면접 일시	__월 __일 __시 __분경
응답자 주소			
연락처(유선)	☎ () -	핸드폰(무선)	H.P () -
면접원 성명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S/V 확인	

I.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

문1.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택 1]

- ① 토지가 부족하다
- ② 토지가 비싸다
- ③ 토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한다
- ④ 토지를 무질서하게 개발한다
- ⑤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 ⑥ 토지 정책이 허술하다
- ⑦ 토지 규제가 심하다
- ⑧ 기타(_____)

문2. 응답자께서는 국가의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으로 땅값이 상승해서 토지소유자가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택 1]

- ① 불로소득은 전부 환수해야 한다
- ② 적당한 비율을 환수해야 한다
- ③ 현금 환수보다는 땅을 내놓게 하거나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한다
- ④ 개인소유이므로 조금도 환수해서는 안된다

문3.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택 1]

- ① 규제에 따른 손실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
- ② 규제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상해야 한다
- ③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문4. 도시에 집, 공장, 도로 등을 건설할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택 1]

- ① 도시 주변 농지나 녹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공급해야 한다
- ② 신도시를 개발해 도시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 ③ 새로운 용지를 공급하기보다 기존 도시용지를 재개발해야 한다
- ④ 기타 (_____)

문5. 국가가 토지를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 1]

- ① 토지시장 안정에 바람직하므로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한다
- ② 토지를 사는데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③ 토지시장 안정효과가 없으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문6.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땅 주인보다 지역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 1]

- ① 토지의 공공성은 중요하므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 ② 토지의 공공성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우므로 부분적으로만 강화해야 한다
- ③ 사유권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없다

문7. 토지의 이용권은 소유자가 갖고 그 토지를 개발하는 권리는 국가가 갖는 등 토지의 이용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 1]

- ① 고질적인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권과 개발권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 ② 사유권 침해가 커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클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문8. 다음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토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택 1]

- ①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를 보호하며 가능한 한 규제하지 않는다
- ②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 소유나 이용은 보호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유나 이용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 ③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 소유나 이용은 보호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④ 토지 사유제도보다는 토지의 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

II.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에 대한 인식

문9. 현행 농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자유전 원칙이 오늘날의 농업현실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 ③ 사실상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어 경자유전 원칙은 실효성이 없다
- ④ 전적으로 유명무실한 원칙이다

문10. 경자유전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경자유전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② 비농민도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비농민의 토지투기를 막을 수 있을 때, 농지소유를 자유화해야 한다

문11. 경자유전 원칙으로 인해 부재지주의 농지 대부분은 자경의무(스스로 경작해야 하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합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영농활동에서 현행 농지임대차제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 ② 농지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공식적인 농지임대차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다
- ③ 음성적인 불법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농지원부에 실경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농지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④ 음성적인 관행임대차는 명문화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불안정하다
- ⑤ 현행 농지임대차제도에 큰 문제는 없다

문12. 농지법에서는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불법적인 농지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이다
- ②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합법화해주는 수단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다

문13. 현행 농지임대차제도(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임대할 수 있게 의무화하여 불법적 농지임대차 문제를 해결한다
- ②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해 농지임대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③ 부재지주의 농지를 소유주가 자경하도록 하고, 자경하지 않는 것은 보다 강력하게 매각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문14.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농작업을 일부 위탁하는 것(작업의 2/3까지)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위탁의 기준을 지켰는지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상의 자경 개념과 관련하여 농작업 위탁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농작업 위탁은 원칙적으로 자경 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② 현재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③ 농지소유자의 농작업 위탁을 경영주의 경영활동으로 이해해서 전부위탁을 허용한다
- ④ 재촌지주(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에게는 농작업위탁을 허용하고, 부재지주(그 지역외 거주 소유자)에게는 작업위탁을 허용하지 않는 (현실성있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문15. 지금까지 농지제도는 소유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십니까? [택 1]

- ① 지금처럼 소유규제 중심으로 농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 ② 농지소유를 자유화하고,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게끔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
- ③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아야 한다

Ⅲ. 농지의 보전 및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문16.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농지를 보전(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7. 현재 정부는 농지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보전농지가 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농지가격이 떨어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상대적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농지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받게 되는 상대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 ② 시장에서 결정되는 농지가격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문18. 최근 보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이 늘어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건축개발이 공간적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농업용 건축이 가능한 지역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응답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찬성한다
- ②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 개발행위가 더 크게 억제되는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19. 준 농림지역에 공장이나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계획적 국토관리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응답자께서는 현재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②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개선되었다 ⑤ 매우 개선되었다

문20. 농지의 취득과 전용과정에 현장실태 심의기능을 담당하던 농지관리위원회가 올해(2009년12월) 폐지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농지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
- ②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기구였기 때문에 폐지해도 상관없다
- ③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농지관리기능 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 ④ 기타 (_____)

문21. 현재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지정보에 대한 관리도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까지 폐지되는 이 시점, 농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택 1]

- ① 통합적인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 농지의 전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② 농지관리는 농지규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농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농지의 거래 및 임대차 관리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농지데이터 정보만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④ 기타 (_____)

DQ.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

- DQ1. 응답대상자 ① 대도시(광역시) 거주자 ② 중/소도시 거주(시/군)자 ③농업인/ 농사 가족
- DQ2. 응답자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 DQ3.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DQ4. 응답자 연령 _____ 세(20세 미만 면접 중단)
- DQ5. 응답자 교육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2, 3년제) ④ 대졸 ⑤ 대학원 수료 이상

♪ 바쁘신 가운데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